"35년 묶인 해안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

〈수자원보호구역〉

정종섭 장관 여수 '바다 규제 토론회'서 시사 보전가치 낮은 해상국립공원 해제 건의 이어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안 그린벨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겠 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 제 끝장토론회' 참석차 여수를 방문해 "수산자 원 보호 이익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충돌한 다면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수 지역 등 남해 안 해상국립공원 규제가 타당한 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여수 지역은 관광자원으로 서 개발하면 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익이 있다"

며 "35년간 이어진 규제가 관광자원 개발 이익 과 충돌하는지 고민하겠다"고 개선을 시사했

그는 "35년 동안 남해안 지역이 오랫동안 수 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며 "일률적 으로 해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 해제가 필요한 곳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 회에는 정 장관외에도 이낙연 전남지사, 주민, 소관 중앙부처 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도 해안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 "수 산자원과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안 그린벨트 육지부 일부 지역을 해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 다면 규제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관공서 의 존재 이유가 될수 있도록 백지상태에서 검 토해 묵었던 일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토론회에서 1982년 지정돼 전국의 53%가 전남에 집중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에 따른 주민 경제활동 저해, 숙박시설과 음식 점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각종 개발행위 제 한 등의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이밖에도 보전가치가 낮은 해상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해상국립공원 내 어업 행위제한을 완화해주기를 원하는 기업인과 양 식어민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원구역 내 '공원해상 휴양지구'를 신설해 편의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질오염 가능성을 고려,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촌계 가입자격을 수협 조합원에서 일 반어업인으로 완화해 어촌계 설립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업인과 해양수산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수부는 또 어획금지기간을 7월에서 8월로 조정해달라는 지역 어민의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海묵은' 바다규제 끝장 토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후 여수엑스포 콘퍼런스홀에서 지역주민과 소관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정의화 국회의장 광주서 '선진 대한민국' 강연

영호남 화합의 전도사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

린 제64회 빛고을E&C아카데미 강좌에서 호 남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조그마한 한반도 가 남북으로 갈려 있고, 동서가 간격이 있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며 "동서화합과 지역균 형 발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1991 년부터 지역감정 해소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한나라당 내 '지 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내 '호남 창구' 역할을 한 공로로 2008년 광주시 명예시 민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



경제 성장률 3.3% 그쳐 개인 부문(가계 및 비영리법인)의 소득을 보 올 3만달러 돌파할지 관심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2만8000달러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 만8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 성장률 는 환율 영향이 적지않았던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8180 달러(2968만원)로전년치(2만6179달러)보다 2001달러(7.6%) 늘었다.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 선에 진입한 1인 당 국민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만8303달러로 떨어졌다가 2011년 2만4302 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등으로 증가해 왔

여줘 '국민의 주머니' 사정과 가장 밀접한 지표 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 5786달러로 전년(1만4704달러)보다 1081달러

그러나 이처럼 소득 증가폭이 큰 원인 중 하 나로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8% 떨어진 영 향도 꼽힌다. 실제 지난해 1인당 PGDI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62만6000원으로 2013년 (1610만2000원)보다 3.3% 증가에 그쳤다.

한편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 파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쉽지는 않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로 3만달러에 바싹 다 가섰지만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쳤다. 미 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자료/ 한국운한

GDP·GNI 추이 국내총생산(GDP) 단위: 억달러, %(전년대비) 12,224 12,027 6,000 --실질 GDP 증가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단위: 달러, %(전년대비) 28,180 26,179 24,302 24,696 20,000 실질 GNI 증가율 10.000 2014년 2012년 2013년

이연합뉴스

전남도, 전국 첫 산림문화자산 4곳 지정

전남도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나주 불회사의 비자나 무와 차나무, 해 남 풍혈동굴 및

샘, 완도수목원

-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
 - 해남 풍혈동굴·샘
 - 완도수목원 숯 가마터

숯가마터 등 4곳 을 전국 최초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

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 수 길과 완도수목원 숯가마 터는 '원안 의결'해 산림문화자 산으로 지정키로 했고 나주 불회사의 비자나무와 차나무, 해 남 풍혈동굴 및 샘은 '조건부 의결'해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 을 보완해 다음달 지정 고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묘에 의해 생산된 묘목으로 가로수 숲길을 조성했다는 역사적 의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보존운동을 통해 가로수 숲 길을 보존하고, 전국 생태관광 명소가 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 불회사의 비자나무와 차나무 단지는 초의선사가 마 셨던 오랜 역사성을 가진 차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 다. 이 차나무로 인해 다도(茶道)면이라는 지명도 생겼다.

해남 풍혈동굴 및 샘은 전남지역 유일한 풍혈동굴이다. 호남읍지에 기록돼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완도수목원 숯가마 터는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구(遺構)다. 조선왕조실록에 완도에서 숯을 생산해 우수 영에 격월로 공납한 기록이 있다. 난대림 수종을 이용한 숯 생산은 향후 산림의 역사, 교육, 문화적 자원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남도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지정고시를 끝내고 조만 간 개최되는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심사위원회에 지정 신 청을 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안군, 도청 이전 효과 '톡톡' 지방세 신장률 전남도내 최고

전남도내 시군 중 최근 10년간 지방세 신장률이 가장 높은 곳 은 무안군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의 2014년도 세입은 305억원으 로 2004년도 보다 170%(192억원)가 늘어 도내 22개 시군 중 신 장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화순군(134%), 영암군(133%), 나주시 (118%) 순으로 신장률이 높았다.

른 남악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아파트, 상가의 재산세, 도청 등 공 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 실제로 무안군의 재산세는 2014년 79억원으로 2004년(25억

무안군의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05년 도청 이전에 따

원)보다 54억원(216%), 지방소득세는 2014년 64억원으로 2004 년(22억 원)보다 42억원(191%), 자동차세는 2014년 118억원으 로 2004년(16억원)보다 102억원(638%) 각각 늘었다.

인구 역시 전남 전체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4.1%(8만명)가 줄 었음에도 무안군은 2014년 8만2000명으로 2004년보다 32.3%(2 만명)가 늘어 전남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